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병삼



삼년상은 유교의 고유한 의례다. 군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사후에는 삼년상을 치렀다. 임금이건, 평민이건 사립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계든, 농사든, 학제든 주로 1년을 단위로 삼는데 부모의 장례는 어째서 3년이어야 할까?

사람이 태어나 제 발로 걷고, 제 손으로 숟가락을 뜯기까지 3년간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유교는 설명한다. 그동안 부모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같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은혜를 배운다. 이 보살핌은 일방적 이기적 절대적이다.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토록 없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은혜를 우주하여 되갚는 의례를 재현해 볼 때辱이다.

즉, 태어나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3년의 경험이 삼년상의 수치적 근거다. 오늘날로 당겨와 해석하면 삼년상은 부모의 죽음을 기화로,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명상하는 ‘인문학 페스티벌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삼년상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다. 부모에게 조차도 ‘빛지고는 못 살겠

다’는 오연한 자존심 말이다. 부모에게 입은 신세조차 빚으로 여기고, 그 빚은 장례를 통해서라도 되갚고자 맡겠다는 ‘자존심 강화’ 인간관이 그 밑에 깔려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의 죽음에 삼년상을 치르고서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을 받

삼년상의 정치학

을 수 있었다.

문제는 통치자의 경우에서 발생한다. 과연 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경영자가 제 부모의 장례 때문에 3년씩이나 공직에서 물러나 있어도 될 것인가? 유교를 표방한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자주 삼년상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곤 했다.

특히 국가 건설 초기에는 인재풀이 축았기에 몇몇 관리들이 삼년상을 치르느라 물려나면 국가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요즘 인기를 끄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주인공인 세종의 처지가 그러했다.

또 삼년상은 전통을 계승하고, 과거의

삼년상을 석 달로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하였다.(이것을 ‘단상’이라고 부른다.)

지난 주말, 북한의 통치자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 아버지 김일성의 사후에 ‘유훈통치’라는 이름으로 삼년상을 치르더니, 그의 아들 김정은도 삼년상을 치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유교국가일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문화에 삼년상을 미풍양속으로 보는 전통적 속성이 남아있는 증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미 서구화된 우리들 눈에 삼년상은 퇴영적이고 우스꽝스런 짓으로 보이겠지만, 북한은 여태 서

폐단은 혁신하는 개혁정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공자가 “3년간 아버지의 정치방식을 고치지 않아야 효자라고 이를 수 있으리라”고 말했던 것은 전통의 계승적 측면을 유념한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함으로써 황후 인재풀을 확장할 수 있다.

이모저모 삼년상이라는 제도가 정치적으로 유용할 순 있지만, 그러나 이미 과거의 풍속일 따름이다. 조선시대라면 군주의 삼년상을 정장을 3년간 후전시키는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삼년상은 그런 정치적, 문화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정은 통치자가 3년 동안 막후에서 책임을 비껴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은 머지않아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인민들의 경제적 삶이 윤락한 상황이라면 삼년상이라는 효행이 정치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기아상태에서는 도리어 사치스런 짓거리로 펼쳐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맹자는 누누이 지적했듯, ‘유향산, 유향심’(有恒產, 有恒心)이라, 인민들의 경제적 삶이 여유로워 충성심도 영속적일 수 있음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진리일 터다. 〈영산대 교수·정치사상〉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성주

우리 아이 눈 관리

므로 되도록 조기에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시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즉 굴절이 상이 있으면 일찍 발견해 교정해주는 것이 약시나 사시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위한 지름길이라 하겠다.

근시란 먼 곳은 잘 알아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 굴절이상의 한 종류로 난시와 합병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근시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는 않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눈을 찡그리고 보거나 TV를 가까이서 보려하고 혹은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보려 하기도 하며, 쉽게 눈피곤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한 번쯤 근시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안경을 착용하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장시간 독서를 하거나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조절근의 피로로

인해 일시적인 근시현상을 보이는 ‘가성근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안경을 착용하면 두통과 눈 피곤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안과에서 조절 마비제를 눈에 넣은 후 시행하는 조절 마비술검사를 통해 근시인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때 측정한 도수를 적용해 안경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안심되고 정밀한 방법이다.

게다가 원시나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조절 마비술검사는 필수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근시가 아닌 경우에는 예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장시간 계속적인 독서나 정밀한 작업은 피하고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해 물체를 정확하고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는 항상 방안의 전체조명을 유지하면서 스탠드등을 책상 상단에 위치하게 해 글씨를 쓸 때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해주어야 하며, 책상이나 의자도 몸에 맞는 것을 사용하게 해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30cm정도로 유지시키고, 머리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TV를 볼 때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3m 이상 떨어져서 보게 해야 하며, TV자체의 위치는 눈 높이 보다 약간 아래가 좋고 역시 실내조명이 있는 곳에서 시청하게 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를 할 때에도 눈 높이 보다 아래쪽으로 25도 각도 정도에 모니터를 위치하게 하며 모니터와 적당하게 떨어져서 사용도록 해야 한다. TV든 컴퓨터든 장시간 들여다보기 되면 눈의 피로와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근시로의 진행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생후 3~4개월이 되도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걸을 때가 됐는데도 걱정 못하고 유난히 잘 넘어지는 경우, 시선이 바르지 못하는 아이 등은 시력 이상이 예상되므로 소아 안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김성주안과 원장〉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른 후 겉계 되듯이 시력도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서 만 8~9세 정도에 보는 기능의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보느냐이며, 만약 아이가 보는데 방해를 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 기능의 발달은 멈추거나 정상보다 늦어진다.

이렇게 늦어진 발달을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이시기가 지나면 거기에서 고정돼,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게 된다.

어린아이의 눈에 굴절이상이 있으면 정확한 상이 막히지 못해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

기고



동장군(冬將軍) 이겨내는 건 사랑의 열기

찾아오는데 우리네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뜻이 낭 호도하며 난리법석이다. 이런 것을 노보라면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갑게 느끼고 하루빨리 따뜻한 봄기운이 기다려지는 간절한 마음마저 듣는다.

전국이 이러할 진데 우리 지역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저런 성금이다 하여 모금운동을 하는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헤매다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금의 분배나 지원의 문제도 부의 부인비빈처럼 공개된 시설이나 잘 알려진 곳에는 그나마 성금이나 후원들이 곧잘 전달되고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은 그 나눔

의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더더욱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란 그 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데 인권수도, 문화수도를 차지하는 우리 광주는 과연 어떠한가.

인권과 문화도 복지가 향상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인권과 문화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정책을 살펴보면 시장님의 선거공약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예산을 100억 원씩 증액하기로 하였는데 약속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추운 겨울철에도 장애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난방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0억 원씩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한테는 예산증액의 효과를 느

길 수 없다는 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증액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분까지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예산의 재원마련 방도 시청 살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예산을 줄여야 될 사업과 전시적인 일회성 행사들을 과감히 배제하여 사회복지예산 쪽에 대폭 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다수의 국민을 위한 행복지수를 높리기 위해 조절을 맞추고 사회 계층 간의 벽을 허물어 국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가 잘되는 것이 선진 사회의 지름길이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아울러 우리 시민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끼는 마음이 풍성할 때 제아무리 추운 동장군(冬將軍)이 찾아온들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고액과외 단속 엄포만 놓지 말고 강력 제재하라

이 지방 학생 상경시 오피스텔 숙박비를 포함해 300만~4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원들은 수시 1차 논술 문제 적중이라는

과장광고 문구로 고액 특강반을 열어 수험생들을 유혹한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문 논술강사라고 하위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수험생들은 다급한 마음에 이런 데 뛰어드는 것이다.

이런 불법 편법 고액과외가 판치는 것은 단속할 법규정이 예매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본다. 학원들은 교묘하게 법의 단속망을 피해간다. 학원비 상한액이 있고, 학원비를 계시해야 하지만 규정은 계시액을 속이는 게 일쑤다. 그러나 학원들이 정부의 단속

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적발된 학원은 등록별소나 교습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고액과외에 책임이 있다. 지금의 대학 논술문제 상당수는 저명 학자조차 “다수의 대학 논술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다. 대학은 완벽한 학생만 뽑겠다는 것인가, 지식을 과시하겠다는 것인가. 난해한 논술문제가 고액 논술과외를 부르는 악순환은 더 이상 안 된다. 학부모·학생도 논술은 1주일로 효과가 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술 실력은 오랜 기간의 독서와 사고, 글쓰기를 통해 향상되

는 것이다. ▲유진규·여천시 신덕동

시설

KTX 광주~목포 구간 저속철화 안 된다

호남고속철의 광주~목포 구간이 ‘저속철화’ 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속노선 신설 대신 기존선을 활용하자는 정부 용역보고에 대해 그동안 전남도와 지역민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음에도 국토부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용역보고 당시 전남지사가 신설안을 주장하며 소송 불사 입장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오히려 저속화를 이유로

호남고속철의 저속화를 보는 지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경부고속철은 전 노선을 고속철로 하면서 호남만 저속철로 한다는 것은 호남차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에 비해 10년 이상 뒤졌다. 그럼에도 한술 더 떠 일부 구간을 저속철로 하는 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민과 지역정치권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존선 활용 이유에 대해 예산절감과 경제성을 들고 있으나 경부고속철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적자상태인 경부고속철 일부 구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속철은 지역발전의 간접적인 구실을 하는 기간산업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무안을 경유하는 고속노선으로 수정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서남해안시대라는 장기 관점에서 고속노선이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에 총력 쏟아야

한나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이유로 등원 거부에 나선 민주당이 한나리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2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의한 뒤 30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내년도 추가 국비사업 규모와 신규사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펴낸 지역현안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추가 및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광주시 국비 가운데 상임위를 통해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근래 최대 액수인 62114억 원, 전남도 역시 F1대회 운영비 144억 원을 비롯해 71914억 원이 증액됐다. 이를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점에 예산 확보는 절대적이다.

현안예산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누락된다면 지역의 미래 청사진

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역국회의원과 민주당이 눈 부릅뜨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예산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한나리당 단독 처리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피해를 본 예산만 무려 5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정부 부처에서 삭감되거나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비를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펴냈지만 한나리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발된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리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어떠한 불발번수 가 불거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결위에서 국비 확보와 사수에 총력을 쏟아, 여의치 않다면 이 지역 출신 한나리당 의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잔재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연기과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아 열연한 대처 전 총리 일대기다.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비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대처는 최근 서방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방세계가 그에 대한 항수에 빠진 이유는 요즘 유로존 국가들을 훑을 때 차별화되는 경쟁력 때문이다. 그가 집권 시절 치킨이다.